

국내 대학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와 연구윤리

● ● 유 병 열 |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개인적인 차원에서 다각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 함으로써 환경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구조와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해당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구와 규정을 마련하고 엄격히 실행해 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들 스스로가 학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해 가야 한다.

I. 들어가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 조작 등의 사건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정부 고위직에 오를 사람의 논문 표절과 이중 게재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사건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학계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가는 가운데 연구윤리가 충실히 실행되는 풍토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인문사회계 분야에서의 연구윤리의 문제, 원인, 대책 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인문사회계 분야라고 해서 이공계와

다른 독특한 연구윤리가 모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부터 짚어보기로 한다. 물론, 대학교수의 연구 활동에 있어 인문사회계 분야는 이공계 분야와 다소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이공계 분야의 연구는 대체로 실험을 많이 하는 데 비해 인문사회계 분야는 실험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는 사회계 분야보다는 인문계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공계 분야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들을 연구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인문사회계 분야에서는 이러한 면이 다소 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공계 분야에서는 연구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인문사회계 분야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공동 연구가 이공계 분야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가 하면, 연구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상의 경험에서 보면 대체로 이

공계 분야에서는 몇 억 또는 몇 십 억 등의 엄청난 액수의 연구비가 책정, 지원되는 경우도 많은 데 비해, 인문사회계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로 몇 백 또는 몇 천 만원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억 단위의 연구비가 소요되는 연구들은 대체로 공동 연구진이 상당히 많이 동원되는 경우거나 간혹 보게 된다.

이렇듯 인문사회계 분야와 이공계 분야 사이에 대학교수들의 연구 종류, 성격, 규모, 활동이나 작업 내용 등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관계로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도 이 두 분야 사이에 어느 정도 다른 특징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공계 분야의 연구에서는 인체 실험, 인권 유린, 동물 학대, 실험 부정이나 실험 결과의 조작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그 윤리적 문제성이 다소 덜 심각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공계 분야의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나 수단과 관련하여 사람이나 동물들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그 생명이나 권리, 복지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윤리적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끼게 되는 데 비해 인문사회계 분야에서는 그러한 면이 다소 덜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연구비의 규모나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관계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들이 이공계 분야 교수들에 비해 연구의 윤리성 확보 문제에 다소 덜 주의를 기울이게 될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문사회계 분야와 이공계 분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차이들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연구윤리를 정립, 실행해 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하겠다. 우선, 두 분야 사이에는 차이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면들도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들의 연구에서도 사람이나 동물을 연구의 대상 또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좋은 예가 된다. 구체적으로,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들을 실험의 대상 또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공계 분야와 마찬가지로 생명이나 존엄성, 권리와 복지 등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의 여러 측면들이 주의 깊게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인문사회계 분야와 이공계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차이들은 연구윤리와의 관련 하에서 보면 양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도덕적 평가를 하거나 책임 판단을 내릴 때, 또는 시인이나 비난을 할 때 그 정도나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이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지, 학자적 양심에서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 학문 공동체의 건전성이나 사회 발전에의 공헌성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일만한 일인지 등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차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 인문사회계 분야이든 이공계 분야이든 연구윤리를 적용하거나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진지하고도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는 인문사회계 교수이든 이공계 교수이든 그 윤리적 삶의 내용과 모습에 있어서는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II.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그러면, 이상 논의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인문사회계 분야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논정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기로 한다. 연구윤리

가 거론되어지는 것은 교수들의 연구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무언가 옳지 못하거나 좋지 못한 점,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점 등등 아무튼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이를 다소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는 매우 다양한데 일단 우리는 이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부정행위는 미

조 혹은 표절하는 행위로 정의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에는 정직한 실수, 의견의 차이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위조(fabrication)란 데이터나 결과 그리고 기록을 날조해 내거나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사실을 밝혀낸다고 하면서도 객관적 증거나 논리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되지도 않는 연구 결과를 조작해 내는 것과 같은 행위가 그 예가 된다고 하겠다. 2000년 11월 일본 고고학계에서 후지무라 신이치가 유물을 미리 묻어 둔 다음 이를 파내어 마치 70만 년 전의 일본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온 양 대사가극을 펼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서, 인문사회계 분야에서 설문조사에 의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어떤 의도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설문지 제작 단계에서부터 모종의 조치를 취하여 조작된 결과를 산출했다면 이 또한 일종의 위조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변조(Falsification)란 연구 자료나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변경 혹은 생략함으로써 연구 기록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대중을 상대로 하여 의견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관련 실험연구를 할 때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 처리하면서 의도된 결과를 나오게 하거나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자료 자체를 누락 내지 생략하는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해석을 내놓는 경우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연구가 방법적으로 허술함을 알면서도 그대로 실행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잘 모르는 경우, 또는 막연히 알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경우와 학자적 본분을 잊고 욕심에 빠질 경우에도 발생한다. 그릇된 학문적·사회적 풍토가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풍토와 따지지 않고 덮어버리는 문화, 그리고 남에게 후하게 인정을 베풀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온정주의 전통 등이 겹쳐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풍토 또한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제도적 차원의 원인들도 연구 부정행위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국 정부 산하의 과학기술정책국(OSTP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과 같은 곳에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연구 계획 수립이나 수행, 또는 심사나 연구 결과 보고에 있어 위조, 변

1) http://www.ostp.gov/html/001207_3.html, 2006. 10. 30 검색

한편, 표절(Plagiarism)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또는 표현들(words)을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공계 분야에서의 연구들이 위조나 변조와 같은 부정행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데 비해, 인문사회계 분야에서는 표절의 유혹이 상당히 높고 또 실제로 자행되는 예도 있다. 표절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른 사람의 글의 일부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연구물에 옮겨 놓는 것이다. 국내외의 문헌이나 인터넷 등에서의 자료를 그대로 번역하여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하는 경우, 보지도 않은 문헌 또는 자료를 전거로 제시하거나 전거를 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여 마치 자신의 견해인 양 하는 경우 등에서 많이 보게 된다. 이 때 물론 일부만을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나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의 글을 통째로 자기가 쓴 논문인 양 가져다가 유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표절 중에는 자기 표절이라고 부를 만한 유형도 있다. 예컨대, 자신이 쓴 논문의 일부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금씩 고쳐서 또다른 논문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자신이 만들어 낸 연구 결과를 몇 개의 작은 논문으로 쪼개어 발표하는 경우도 일종의 자기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몇 개의 작은 논문으로 쪼개어 학회 논문집에 실거나 발표하는 경우, 또는 승진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된다. 나아가 연구물의 이중 내지 중복 게재가 있는데, 이미 특정한 곳에 발표하거나 게재한 논문 또는 연구 결과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들은 일종의 자기 표절을 행하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겠다.

이상, 좁은 의미의 경우들을 보았는데 사실 연구 부정행위는 이러한 정도를 넘어 보다 넓은 의미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연구 부정행위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우선, 위의 좁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은 물론 그 외의 것들까지 포함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넓게 법령으로 정한 바들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립 기관이나 단체, 학회, 조직 등에서 표방한 강령이나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등이 넓은 의미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다음, 가끔 보게 되는 것으로서 저자 표시나 공로 배분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 논문 발표나 출판과 관련하여 연구하지도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는 경우라든가 스승이나 수석 연구자를 당연히 올리는 관행, 또는 반대로 실제로 연구한 사람을 공동 저자에서 빼는 경우 같은 것이 그 예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저자를 나열하는 순서나 연구에의 기여도와는 다르게 업적을 배분하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된다.

그런가 하면, 연구비와 관련한 부정행위들도 있을 수 있다. 연구비를 낭비하거나 그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 유용하는 경우, 또는 충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당 착복하거나 하는 경우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컨대, 연구비를 지급받은 후 해외 학회 참석이나 자료를 발굴, 수합하러 간다고 해놓고는 형식적으로, 또는 부실하게 하면서 대부분 여행이나 관광에 사용하고 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연구비를 지원받아 대학원생이나 여타 공동 연구원들에게 그 작업과 활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특정인이 착복하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들도 있

을 수 있다.

한편, 태만이나 무책임한 실수, 진리 추구와 거리가 먼 행태 등과 같은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 태만은 예컨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과 작업을 경주하지 않음으로써 연구 과정과 결과를 부실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라든가 공동 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맡은 몫을 소홀히 하여 전체적으로 연구에 폐를 끼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예컨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거나 보통 정도의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여 좋은 연구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독단이나 편견, 무지를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 등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연구 실천 과정에서 대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처사들로 인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원들 사이, 남자와 여자 연구원 사이 등에서 차별이나 불평등, 괴롭힘, 성희롱 등과 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된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실험 기구 또는 기자재 사용에 간섭 또는 폐해를 입히는 경우도 이 유형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악의적인 변명을 늘어놓은 경우,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또는 합리적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 위협이나 보복을 가하는 경우 등등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인문사회계 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연

구 부정행위들의 유형과 사례들을 간단히 짚어 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 국내 대학 인문사회계 분야의 교수들에게 있어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얼마 전 정부의 고위직에 오를 사람의 논문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부에서는 논문 표절이나 이중 게재 등의 일이 학계의 관행이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많은 인문사회 계열 교수들은 대부분 상당히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연구윤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듯이 보이는 교수들과 그러한 행태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 대학 인문사회 계열의 대부분의 교수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많은 교수들은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소수의 교수들이 잠시 잘못 생각하거나 실수를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침소봉대하거나 교수 사회의 일반적 현상인 양 오도 내지 매도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 원인

그러나 아무튼,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들에게 있어 연구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또는 막연히 알고 있어서 그러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연구와 관련

하여 상당한 정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며 이를 준수하는 일과 관련하여 적절한 방식을 따르거나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그 예가 된다. 이 경우는 석·박사과정 등 학문적 수련 기간 동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스승, 동료 또는 선후배 학자들 등으로부터 좋은 모델을 접하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해서 그리 되는 면이 많다고 하겠다.

다음,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해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일종의 도덕 불감증 같은 것에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예컨대, 표절을 하지 않는 일 등과 같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예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여타 교수들의 글 같은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베끼는 가 하면(이 중에서 좀 나은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거나 서로 전화 통화 같은 것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당신의 글이나 저서를 좀 베꼈으니 그런 줄 아시오' 하는 식으로 말이라도 해주기도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의 연구 결과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져다 쓰는 행태를 보이곤 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연구윤리를 가급적 꼼꼼히 지켜 가려고 애쓰는 여타 교수들을 종종 소심하다고 비웃는가 하면, 스스로를 매우 화통하고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과시하곤 한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학자적 본분을 잊고 욕심에 빠져서 연구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등등이 많아서 교수와 학자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된다. 교수나 학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과도한 연구 과제를 받음으로써, 또는 자신이 정통으로 전공하지도 않은 분야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에 연구에 응함으로써, 또는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급하게 책 같은 것을 출간함으로써 부실한 연구 결과를 내놓거나 위조, 변조, 표절 등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명예욕의 경우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 대우받고 싶어서 외국의 문헌이나 인터넷상에서 구한 자료들을 먼저 접하게 된 것을 기회로 하여, 이를 거의 베끼거나 번역해 놓고는 마치 자신이 저작한 것처럼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양 행세하는 사례 같은 것이 그 예가 된다. 권력욕의 예로는 정부의 고위직이나 정치 또는 사회문화 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정부, 공공 기관, 언론이나 방송, 기업, 기타 등등에 열심히 뛰어나면서, 시간과 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연구업적이나 경력들을 부풀리고자 부실하게 연구하거나 거짓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류의 인사들에게서 학자적 양심이나 학문적 충실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의 그릇된 학문적·사회적 풍토가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현대적 의미의 학문은 광복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서양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연구해 놓은 것들을 배우고 그 이론과 방법론 등을 받아들여 이를 활용 내지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면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 과정에서 선진 학문을 가져다가 소개하거나 가르쳐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으로 여겨져 표절이나 기타 부정행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용인되는 관행과 풍토가 형성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래 전

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풍토와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덮어 버리는 문화, 그리고 가급적 남에게 후하게 인정을 베풀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이른바 ‘온정주의 전통’ 등이 겹쳐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풍토와 행태들이 스승에서 제자에게로 이어지고, 동료와 선후배 사이 그리고 학계 등에서 점잖고 후덕한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자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여타 기관이나 단체들의

우리의 연구윤리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지 등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활발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 연구윤리와 관련된 관심과 의식을 일깨우고 그 실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제도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실질적인 실행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회적 환경 및 대학과 학계 등의 풍토를 형성해 가는 일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릇된 행태들도 한 몫 한 면이 있다. 즉, 학회나 기관에서 기획 행사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글이나 논문들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디에 발표한 글이라도 좋으니 보내 달라고 심하게 독촉을 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을 해오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교수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은 그동안의 풍토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했음이 밝혀졌는데도 대학 내의 인간관계나 온정주의 풍토로 인해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 표절이나 여타 부정행위를 한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학회나 기관 차원에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덮어 버리는 경우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의 원인들 또한 지적될 만하다. 즉, 학회나 기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분명한 규정이나 기구, 제도 등을 갖추어 놓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거나 드러난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해 오지 않았던 사례들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사실 연구윤리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외국의 경우들을 보면, 국가 차원의 법령이나 기관, 학회 차원의 규정 등을 통해 엄격하고도 합리적인 제도들을 설치, 운영하면서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연구윤리는 그 제도화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취약성을 가진 채 지금까지 어물어물 지내왔다고 하겠다.

Ⅳ. 연구 부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다각도적인 접근 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개인윤리적 접근과 사회윤리적 접근의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개인윤리적 접근이니 사회윤리적 접근이니 하는 것은 그동안 윤리학 분야에서 논구되어 온 것들로서, 전자는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며, 후자는 사회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 즉 사회의 구조나 제도, 관행, 풍토 등을 도덕적으로 형

성, 운영하는 것을 과제로 하여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사회윤리적 접근 측면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의 일반적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삶의 조건과 토양이 상당한 정도로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거나 그들의 도덕의식 또는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대체로 실효성도 미흡하다. 바로 이러한 점을 통찰하여 사회윤리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지만, 역으로 도덕적인 사회가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는 점을 중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또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어떤 적절한 사회적 풍토와 문화 및 제도 등을 구축하여 실행해 가는 일이 크게 강조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장에서 방안을 강구해 보면, 우선 연구윤리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 함으로써 환경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일은 학회나 기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갈 수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식으로 해 나갈 수도 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구윤리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되어 나아가야 하는지 등 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활발하게 벌여 나감으로써 연구윤리와 관련된 관심과 의식을 일깨우고 그 실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제도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실질적인 실행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회적 환경 및 대학과 학계 등의 풍토를 형성해 가는 일이 추구되어야 한다 하겠다.

다음, 이러한 연구와 논의 및 의식과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벌여 나가는 동시에 연구윤리의 정립과 실천을 실질적으로 담보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와 제도 및 환경을 확립해 나가는 일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서 이와 관련하여 한두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면, 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이를 기획,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에서 연구와 관련한 부정 사례의 조사 및 원인 규명, 연구 부정행위의 방지 및 예방,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정직하고 책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또한 실행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이러한 기구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연구윤리와 관련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법령 수준에서 구축하여 제공해 주는 방안 같은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이러한 차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 조치와 노력이 착수된 것으로 보여 기대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기관과 대학, 학회와 단체 등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구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실행해 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일부 기관이나 대학, 몇몇의 우수한 학회나 단체들의 경우 이미 대내외적으로 연구윤리 증진을 위한 방침을 공표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가고 있기도 하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점차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또 심화시켜 가야 하리라

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특히 인문사회계 분야에서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 생명공학이나 정보공학 그리고 의료 분야 등에서는 그 하는 일의 특성상, 그리고 일찍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비교적 분명하고도 심각하게 드러났던 관계로 이전에 이미 연구윤리에 대해 눈을 뜨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다. 따라서 연구윤리를 제도화하고 실행해 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공계 분야가 인문사회계 분야보다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인문사회계 분야에서는 연구윤리에 관한 기구나 규정 및 제도 등을 만들어 제대로 운영하는 일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하겠다.

이상, 연구윤리를 구축하고 실행해 가는 일과 관련하여 사회윤리적 접근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접근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관계로 여기에 더하여 개인윤리적 접근이 같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아무리 환경을 조성하고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하려 한다면 이를 모두 막아낼 수는 없다. 더군다나 법령이나 규정, 제도와 같은 외적 조건들에 의해 교수들의 연구윤리가 유지된다면 이는 지극히 개탄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학문과 진리 탐구를 본질로 하는 교수 집단과 학계의 도덕성 수준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연구윤리를 제대로 구현해 내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환경론이나 제도론 또는 구조론에만 매달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교수들 개개인의 연구윤리 의식과 실질적인 실천 노력이 높은 수준에서 발현되도록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러한 관점에 의거한 개인윤리적 접근 방안들을 한두 가지 생각해 보면, 우선 천민

자본주의적 풍조가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 있어 우리 인문사회계 분야 교수들이 스스로 학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일부터 시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한 예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선비정신과 같은 것을 되살려 이어가는 등의 노력이 그 예가 된다 하겠다. 서양식의 사유방식에서 보면 제도나 법, 규정과 같은 것으로 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맥을 잇는 연장선상에서 대책의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사실 연구윤리의 확립은 교수들의 지성과 내면의 도덕적 신념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일어나야 그 근본이 바로 서게 된다. 그리고 이는 세속적 쾌락이나 물질 만능주의 또는 권력 지향주의 등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학문 연구와 청빈함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비의 삶을 교수의 참모습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부터 바로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돌이켜 보면, 인문사회계 분야에서의 연구윤리와 관련한 공식 부문의 교육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사실 이공계열에서는 예컨대 의과대학에서의 의학(의료)윤리, 생명공학 분야의 생명윤리 등의 과목을 통해 연구윤리 성격의 내용들을 가르쳐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문사회계 분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연구윤리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을 실행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연구의 생명은 진실성(integrity)에

있고 이를 위해 정직성과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과 같은 가치들을(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편역), 『연구윤리소개』, 2006, p. 7) 존중하고 추구해 가야 한다는 점, 진정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 공정, 신의, 준법,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덕성들을 길러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고 또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분명하고도 심도있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윤리 관련 과목들을 특히 전문가나 학자로 진출할 학생들의 경우는 이를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을 선택과목으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여타 과목 속에 일부 내용으로 담아 가르치는 방안 등 다양한 교육방안들에 대해서도 숙고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교수나 그 외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조언자요 정신적·도덕적 스승(mento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

데 스스로 연구윤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업과 실제 생활 속에서 연구윤리를 존중, 실천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에 익혀갈 수 있도록 건전한 학습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해 가는 노력 또한 꾸준히 기울여 가야 하리라고 본다. **대학**

유병열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에서 도덕교육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제6, 7, 8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심의위원을 역임하였고,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정보화시대의 초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도덕과 교육과정과 도덕교육적 접근”, “초등 도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윤리학과 도덕교육』, 『도덕교육론』, 『인격교육의 실제』 등이 있다.